
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

2025. 12. 17.

I. '25년 평가 및 향후 업무추진방향

① '25년 추진 실적 및 성과

- (현장 중심 정책 설계) 중소·벤처·소상공인 분야별 릴레이 간담회 등 장·차관 64회 현장 간담회 개최 → 현장건의 정책 반영
- ('회복'과 '성장' 전방위 노력) 내수 활성화, 美관세 등 당면 위기 대응 + R&D 사업화, 제조 AX, 기술탈취 근절 등 혁신엔진 재가동에도 노력

분야	정책여건 및 현장의 목소리	주요 실적 및 성과
민생 회복	<p>정책여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불확실성 증가로 내수침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민간소비 증감율(%), 전기대비) : ('25.1분기) △0.1 → ('25.2분기) 0.5 <p>현장 목소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배달비·공과금 등 고정지출만 月100만원 이상, 경영지원 절실 (소상공인 회복·안전망 간담회, 7.30) 	<p>주요실적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개최(11월) 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매출 제한 법제화(11.27) ■ 성실상환자 인센티브 부여, 배달·택배비 등 350만 소상공인 1.6조원 경영부담 완화 <p>성과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14.1조원 소비촉진 → 3분기 민간소비 3년만에 최대 증가 등 내수경기 반등 기여
혁신 재가동	<p>정책여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중소기업 R&D 예산 대폭 감소 ■ '25년 2분기 벤처투자 △13% <p>현장 목소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벤처투자 확대를 위해 모태펀드 존속기간 연장 등 정부 역할 필요 (벤처 협단체 간담회, 8.13) ■ 중기 R&D 사업화 부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GDP 대비 R&D 비중 세계 2위이나, 대학·연구기관 기술이전율 30.2% ■ 美관세 등 글로벌 불확실성 증가로 中企수출 부담 증가 (수출 중소기업 간담회, 8.6) 	<p>주요실적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'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' 개소(12.1) ■ '26. 中企 R&D 예산 역대 최대 2.2조원 편성 ■ '美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방안' 발표 및 즉시 시행(9.3) ■ '재도전 응원본부' 발대식(12.11) ■ 모태펀드 존속기간 연장장치 마련(12.2) <p>성과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3분기 벤처투자 4조원 달성(4년만에 최대) ■ 3분기 中企 수출 역대 최대(304억 달러)
공정 상생 기반 조성	<p>정책여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年 기술탈취 피해건수 300건, 평균 손실액 18억원 추정 <p>현장 목소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제조업 중심으로 상생제도 운영 (온라인 현장의 목소리, 9.20) ■ 에너지 비용 증가로 제조단가가 지속 상승하나, 납품단가에는 여전히 미반영 (납품대금 연동제 간담회, 8.29) 	<p>주요실적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기술탈취 손해액 전문기관 촉탁근거마련(11.13) ■ 상생금융지수 입법完(11.13) ■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 한화 등 참여(10.31) ■ 납품대금 연동제 대상 에너지 비용 포함 및 연동제 탈법행위 명확화 입법完(11.13) <p>성과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상생결제 역대 최대 169조원(1~11월) ■ 개방형 혁신으로 수요기업의 원가 절감, AI 서비스 품질 향상 등 협업 성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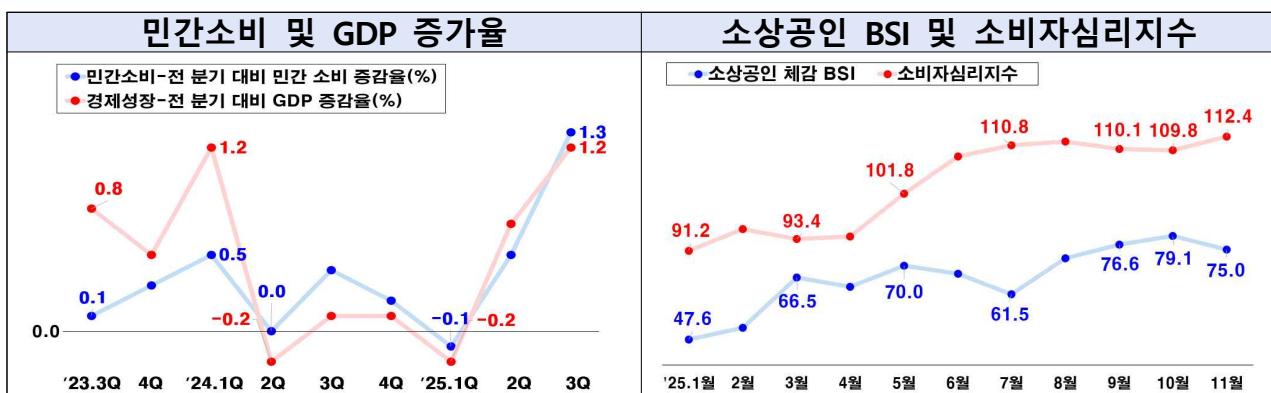
1. 소상공인 소비촉진으로 민생경제 회복

□ 실적 : 소상공인 소비촉진 및 경영 안정화에 총력

- (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^{10.29~11.9}) 全 부처 소비 촉진 행사 최초 통합
 - (상생페이백^{9~12월}) 全 국민 대상 전년 대비 추가 소비분의 20%를 '온누리 상품권'으로 지급 → 국민 1,490만명 신청, 1.1조원 환급
 - (온누리상품권) 대형 병원·마트 등의 가맹점 가입 제한 근거 마련 (11.27 「전통시장법」 개정 → '26.上 매출액 기준(예 30억원) 마련(시행령 개정))
 - 환급 행사 3회* 실시 → 국민 1,124만명에 766억원 환급
- * ①1차 추경(5.11~9.30), ②특별재난지역(8.24~10.15), ③코리아그랜드페스티벌(10.29~11.9)
- (금융·경영부담 완화) 성실상환 소상공인 인센티브 제공(금리인하 등), 공과금·보험료·배달·택배비 등 경영부담 완화(총 353만명, 1.6조원)
 - (재난) 재난 피해 소상공인에 시설복구·긴급자금 지원 근거 마련(「재난 안전법」 개정) → 당진 수해 등 피해 복구 지원(2,400여개사, 1,675억원)
 - 화재공제 지원 확대(기존전통시장 → 확대(골목형)상점가(「전통시장법」 개정, 11.27))

□ 성과 : 새정부 출범 후 14.1조원의 소비 촉진 등 내수경기 반등 기여

- (소비촉진) 온누리상품권 2.1조원, 상생페이백 12조원 등 14.1조원
- (경기지표) 민간소비 1.3% 증가 3년 만에 최대, 3분기 GDP 1.2% 성장 6분기만에 1%대 기록 + 소상공인 BSI 등 체감지표도 개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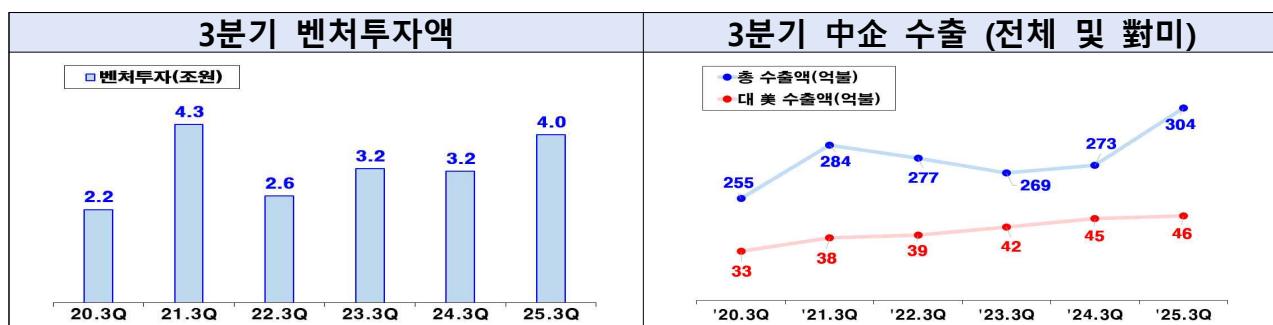
2. 멈춰있던 혁신 엔진 재가동

□ 실적 : 중소기업 R&D 예산 복원 등 잃어버린 혁신 동력 재확보 주력

- (창업) ‘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’ 개소(12.1) : 경영·세무 등 통합 지원
→ 10일만에 512개사의 고민을 접수하여 94% 즉시 해결(12.1~12.10)
- (기술혁신) 중소기업 R&D 예산 역대 최대 2.2조원('26) 편성
 - * 돈이 되는 中企 R&D 혁신방안(9.25) 및 AI 기반 스마트제조혁신 3.0 전략(10.24) 마련
- (글로벌) 美관세 관련 수출中企 지원체계 구축(중기부·산업부·관세청 등), 현장애로 즉시대응* 및 中企 온라인 수출 활성화 방안 마련(11.12)
 - * 현장애로 접수·대응(2,313개사) → 자금·바우처 등 연계 지원(937개사, 1,899억원)
 - APEC ‘스타트업 얼라이언스’ 출범 및 글로벌 스타트업 행사 ‘컴업’* 개최
 - * (컴업, 12.10~12.12) 46개국 275개사 참여, 개최 전부터 1,000여건 비즈매칭 확정
- (재도전) 컨설팅·정책자금 등을 연계하는 ‘재도전 응원본부’ 발족(12.11)
- (투자) 모태펀드 존속기간 연장장치 마련(‘벤처투자법’ 개정, 12.2), 금융권·연기금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감원 MOU* 체결(11.28)
 - * 벤처투자 통계 고도화, 모험자본 감독 강화, 혁신기업 정보 공유로 연계 투자 등

□ 성과 : 벤처투자액 반등 및 역대 최대 3분기 中企수출 기록

- (벤처투자) 3분기 투자액 4조원, 4년 만에 최대 *('22) 2.6, ('23) 3.2, ('24) 3.2
 - 연기금투자풀 벤처투자 최초 참여(무보기금 200억원 출자, 8.18)
 - 4개 지역 벤처 모펀드 4천억원 규모 결성(부산, 충남, 강원, 경북)
- (수출) 3분기 中企 수출 304억 달러, 對미 수출 46억 달러 역대 최대 기록



3. 대·중소기업 공정·상생 기반 마련

□ 실적 : 기술탈취 근절 방안 등 새 정부 공정·상생 방안 구체화

- (기술탈취) 법원이 손해액 산정 시, 전문기관에 촉탁 근거 마련(「상생협력법」 개정, 11.13)
- (상생금융) 금융사·中企 동반성장 수준을 평가하는 상생금융지수 신설(「상생협력법」 개정, 11.13)
- (방산) ‘방산 스타트업 챌린지’ 참여 기관 10개사(한화오션 등) 모집(10.31)
- (상생결제*) 1차 이하 활용 기업 세제혜택 일몰 연장(「세법」 개정, 12.2)
 - * (구매기업) 외상매출채권 발행 → (1차이하 협력사) 채권 만기일 전에 구매기업 신용으로 조기 현금화가 가능하고, 구매기업 부도 시 은행이 손실 부담
- (납품대금) 연동제 대상 확대(원자재 → 에너지 비용 포함), 쪼개기 계약, 미연동 강요 등 탈법행위 명확화(「상생협력법」 개정, 11.13)

□ 성과 : 상생결제액 역대 최대 달성을 상생 이행 확대

- (상생결제) ’25.1~11월 상생결제액 역대 최대 169조원 달성
 - * 상생결제액(1~11월) : ('22) 149 → ('23) 155 → ('24) 163 → ('25) 169조원
- (개방형혁신) 스타트업(110개사)·수요기업(대·중견 76개사) 매칭 → 수요기업의 원가 절감, AI 서비스 품질 향상 등 협업 성과 창출
 - * (수요에코프로·공급앰버로드) 2차전지 최적화 솔루션 개발, 연간 40억원 절감 효과
 - (수요농협은행·공급스위치원) AI 활용 환율 예측 솔루션 개발, 정확도 70%로 상향

② 보완점

- 중소기업 지원의 효율성 제고와 성과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혁신성장 관점에서 정책 고민 필요
- 수도권을 넘어 지역 곳곳으로 성장 기회를 확산하여 지역기업 혜력 제고 및 지속가능성 확보 필요
- 분야별·맞춤형 정책들에도 불구하고, 정작 중소·벤처·소상공인이 필요한 정책을 쉽고 정확하게 찾고 이용하기 어려워 정책효과 극대화 한계

3 향후 업무추진방향

비전

중소·벤처·소상공인 성장사다리 복원

AI·딥테크 창업 1만개사,
혁신 소상공인* 1만개사(~'30)
* 로컬 크리에이터 + 강한 소상공인
+ 유망 브랜드 소상공인



혁신중소기업* 지역 비중
('25) 39% → ('30) 50%

* 벤처기업 + 이노비즈 + 메인비즈

< 3대 업무추진방향 >

① 중소·벤처·소상공인 정책을 성장 촉진과 성과 중심으로 전환

- 중소기업 성장 유형을 체계적 분류 → 유형별 차별화된 정책 마련
 - ① 성장성·잠재력 평가 기준 마련 → 유형 분류(고속성장 > 성장유지 > 성장정체·하락 등)
 - ② 성장성 보유 → 투자·R&D 등 집중, ③ 성장성 부족 → 경영회복·사업전환 등 체질개선
- (소상공인) 성장촉진·성과 중심으로 지원하되 회복·경영지원 병행
- (창업·벤처) 창업에서 유니콘으로 성장하는 성과 창출에 집중
- (제조中企) AI 대전환으로 생산성 혁신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

② 지역 생태계에 과감한 지원('25년 대비 두배 이상 목표)

- ① 지역 할당, ② 지원율 상향, ③ 지역 전용예산 확대 등 정책 전면 재설계
- 범부처 협업 확대 → 기업 + 생활·문화 등이 결합된 지역 생태계 구축

③ 데이터 기반 수요자 중심의 中企 지원 서비스 혁신

- 「중소기업 통합지원 플랫폼」 구축 : ① 정부·지방정부 中企 정책정보 통합 제공 → ② 지원사업 AI 추천 → ③ 단일 로그인 신청
- 디지털화로 신청서류 50% 이상 감축(평균 9개 → 4.4개)
- AI 활용 기업평가 확산 : 중소기업 지원사업, 민간은행, VC 등

4대
과제

① 지역 민생에 활력을, 활기찬 소상공인

② 청년의 미래가 열리는, 창업·벤처 활성화

③ 경제 허리를 튼튼히, 제조 중소기업 혁신과 성장

④ 노력한만큼 정당한 성과를, 공정과 상생성장 생태계

II . 4대 추진과제

1

지역 민생에 활력을, 활기찬 소상공인(국정과제 61)

- ◇ 청년 중심, 문화·관광 등과 결합된 지역상권 조성 및 내수활성화
 - ◇ 데이터 기반 선제 위기 대응, 금융·경영부담 완화 등 안전망 확충

핵심 목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소매 판매액 지수 : ('24) 101.9 → <u>('26) 105.0</u> → ('30) 110.0 · 디지털 기술 활용비율 : ('24) 30.8% → <u>('26) 40%</u> → ('30) 60%
------------------	--

① 청년 · 상권 주도 성장형 소상공인 육성

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로컬 혁신창업가 육성

- 청년이 이끄는 ‘로컬 창업가’ 1만개사 발굴 → 로컬 크리에이터 등
‘로컬 기업가’ 年 1천개사 육성

* (예 : 강릉 테라로사) 로스터리, 박물관 등 단순한 카페를 넘어서 문화체험 복합공간으로, 강릉의 관광 자원에 더해 커피문화를 결합, 관광객 유입

- 뷰티, 맛집 등 경험상품은 판매·마케팅(가이드북, 지도, 플랫폼 등록 등),
로컬 제조품은 온·오프 유통채널 입점, 해외홍보, 수출까지 지원

- 「로컬 창업타운」을 통하여 교류·협업·정보공유 등 지원('26, 2개소)

- 로컬창업 비수도권 지원비중 90%까지 확대 등 지방 우대(現 79%)

앵커스토어 중심 상권 전국 확산 신규

- (범부처) K-컬쳐·인바운드 관광 등 결합 → 전국에 글로컬 상권 17곳, 로컬거점 상권 50곳 조성(범부처 협업 상권육성 프로젝트, ~'30)

- (민관협력) 조례제정·상생협약을 확산하고, 상권 내 소상공인 간 조직화·협업 등 촉진을 위한 재정적 기반 마련(50곳, 1곳당 5억원)

소공인 본격 육성

- 스마트공방 구축('26. 2,000개사) 및 업종별 선도공방 지정(年 20개사)
 -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해 적재 장비, 안전 세서 등 지원(1,800개사, 126억원)

② 소상공인 매출기반 확보

□ 글로벌 수요 유입 : 범부처 합동 소비촉진 행사

- '25년 범부처 합동 「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」 →
'26년 지역·대기업·외국인이 어우러지는 '글로컬' 행사 원년으로 확장
 - 온라인 중심 現 축제에서 오프라인 행사 강화를 통한 체감소비 강화
 - 전통시장, 상권, 지방정부 등 지역 주체간 네트워킹 강화
 - 유통 대기업의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 → 디지털 소비 극대화
- K-POP, 지역 관광정책 등과 연계하여 내·외국인이 모두 찾아오는 글로벌 상권·시장 육성
 - 문화·관광형 시장(80여곳) 중심으로 시장 방문 유도 이벤트,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등 추진
 - 백년가게 등 소상공인 맛집지도를 개발하여 홍보(관광공사 협업)
- '디지털' 온누리상품권 규모 확대(전체 5.5조원 중 '25. 3.8 → '26. 4.5조원)
 - 온누리상품권 사용처인 골목형 상점가 확대('25. 1,438 → '26. 1,600곳)

□ 소상공인 온라인·디지털 역량 강화

- 소상공인 업종·역량 수준에 맞는 맞춤형 디지털 지원전략 수립
- 무신사, 카카오 등 민간 플랫폼 주도 유망 소상공인 직접 발굴 → 정부 1:1 매칭지원으로 온라인 성장 지원(年 3,500개사)
 - 플랫폼사 선정 우수 소상공인은 AI 도입, 해외 진출 연계('26. 30개사)
- AI 교육 및 AI 활용 제품 개발·서비스 도입 지원 : 비용절감 등 생산성↑
- 소상공인 수출 패키지 지원(교육 → 수출용 제품개발 → 판로, '26. 100개사)
 - 글로벌 플랫폼 + 유망 국내 플랫폼 활용 소상공인 온라인 수출 촉진
 - * 일본·프랑스 등 현지 쇼핑몰 + 국내 유통사의 해외 판매망 입점 지원
- 판로 확대를 위한 전용 T커머스(데이터홈쇼핑) 신설 협의(방미통위)

③ 데이터 · 디지털 기반 선제 대응으로 소상공인 위기 극복

※ 국세데이터 연계를 통한 정확한 순 자영업자 규모 파악(다중·부업사업자 선별 등)
→ 정책대상 명확화 및 영세 자영업자 대상 재정지원 효과 극대화(국세청 협업)

□ 부실 위험 소상공인 ‘선제적 위기대응 원스톱 체계’ 구축(‘26.6~^{신규})

- ① 대출 보유 소상공인 전체 300만명 : 위기 징후 상시 모니터링
- ② 위기 포착 소상공인 年 10만명 내외 : AI 경영분석 및 맞춤 정책 안내
- ③ 폐업 및 준비된 취업·재창업 촉진(‘26. 3,056억원, 전년比 +606억원)
 - 폐업 : 점포철거비 확대(400→600만원), 임대차·세무·법무 등 컨설팅
 - 취업 : 중기부마인드셋-노동부직업훈련 연계 강화(‘25. 2천 → ‘26. 3천명)
 - 재창업 : 빅데이터 분석·제공(매출·상권 등) → 준비된 창업에 자금지원
- ④ 유관기관 협력 확대 : 전국회생법원 + 금융위(서민금융) + 지방정부(복지)

□ 소상공인 경영·금융 안전망 강화

- 경영안정바우처* 지급(‘26. 5,790억원) : 공과금(전기·수도·가스) 등에 사용
 - * 연매출 1억 400만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 230만개사에 25만원씩 지원
- 따뜻한 소상공인 금융 시행
 - 소상공인 정책자금 3.4조원(‘26)의 60% 이상을 비수도권·인구소멸 지역 배정 + 0.2%p 금리우대^{신규}
 - 소상공인·중소기업 정책자금 컨설팅 양성화 법제화(‘중소기업진흥법’ 개정)
 - 성실상환* 및 폐업**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
- * 인센티브 확대 : (대상) 대출 완납자 포함, (추가대출 한도) 1억원→2억원, (금리) 0.3%p ↓
- ** 지역신보 보증부대출 상환기간 최대 15년 연장 + 보증료 전액지원 + 우대금리(1.7만개사)
-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(‘26, 4.2만명 / 5년간 납입료의 최대 80%)
-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확대(폐업시 공제, 분기 300만원 → 年 1,800만원)

- ◇ 지역·청년·기술인재 창업 활성화부터 글로벌 진출까지 전주기 지원
- ◇ 투자, 규제, 재도전 등 현장애로 A부터 Z까지 해소

핵심	· 모태펀드 지역투자액 : ('24) 0.8조원 → ('26) 1.2조원 → ('30) 4.0조원
목표	· 기술창업 비중 : ('24) 18.2% → ('26) 20% → ('30) 25%

① 국민·청년·재도전자 등 '모두의 창업' 시대 개막

□ 다양한 주체 창업 활성화 신규

- (국민) 오디션 방식 '모두의 창업 프로젝트'로 창업루키 年 100명 선별
 - * 혁신 창업가 1,000명 발굴 → 경연을 통해 100명 선별 → 별도 절차없이 창업·투자 연계 지원
- (청년) 신산업 청년 스타트업에 소득·법인세 감면 확대(기재부 협조)
- (외국인) 첨단기술 보유 우수 외국인을 특별귀화 대상자로 발굴·추천
 - * 스타트업 특별비자 추천제도 활용, 중기부가 특별귀화 추천기관 역할 수행
 - ** 외국인 창업가 등 글로벌 특화 창업 인프라인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(GSC) 3곳 조성(~'30)
- (기술인재) 벤처기업 스톡옵션 개별 부여를 주주총회 특별결의 → 이사회 결의 사항으로 위임하고 인센티브* 강화(「벤처기업법」 개정)
 - * (예) 시가 미만 발행한도 확대(5 → 20억원), 행사 제한기간 완화(2 → 1년)

□ 실패가 성공의 자산이 되는 재도전 생태계 구축 신규

- '재도전 응원본부'를 본격 운영하여 지역별 재도전 종합지원센터(19곳) 및 재도전 지원기관(중진공·창진원·기보 등)의 컨트롤타워 역할 부여
- 재도전 스타트업에 대한 자금 공급 대폭 강화(보증 + 용자 + 펀드)
 - * (보증) 신규 '재기지원 특례 보증'으로 기술보증 변제 실패 기업인을 재지원
 - (용자) 회생기업 전용자금(年 50억원) 지원 범위를 회생종결 → 회생절차 기업까지 확대
 - (펀드) 1조원 규모 재도전 펀드 공급('21~'25 1,500억원 → '26~'30 1조원, 약 7배)
- 재도전 지원대상 폭넓게 규정(사후적 폐업, 폐업 1년 후 동종업종 재창업 등)
- 벤처투자 전반으로 스타트업 대표 연대책임 금지* 확산
 - * (기존) 벤투조합·회사 → ('25.12) 창업기획자·개투조합 추가 → ('26) 신기사 추가(금융위)

② 지역 창업 · 투자를 수도권 수준까지 확대

□ ‘지역거점 창업도시’ 10곳 조성 신규(‘26. 5곳 → ~’30. 10곳)

- (핵심요소) ①인프라 + ②인력 + ③사업화 + ④네트워킹 + ⑤정주여건

① **인프라** : 창업스타트업파크 5곳, 투자 14개 시·도별 엔젤투자허브*(現 4곳)

* 지역 내 투자자 육성 및 지역 스타트업 발굴(기업-투자자 매칭데이 등)

② **인력** : 창업중심대학 확대(11 → 17곳), 신규 딥테크 특화 창업중심대학(3곳) 지정

③ **사업화** : TIPS 지역 50% 우선 할당 및 투자요건 50% 완화(2→1억원),
지역 스타트업 전용 사업화 지원(‘26. 122억원)

④ **네트워킹** : 권역별 ‘지역창업 페스티벌’ 릴레이 개최(年 12회 내외)로
지역 유망 스타트업과 스타 창업가·투자자 등 교류의 장 마련

⑤ **정주여건** : 주거·교통·문화 등 범부처 인재 유치 기능 연계(지방시대위 등 협업)

* 시대위 주관 특위 구성 예정, 국토부 도심융합특구, 기업형 첨단도시 등 연계 검토 중

□ 지역성장펀드 총 3.5조원 마련(‘26. 7천억원 목표 → ’30. 3.5조원)

- 14개 시·도에 1개 이상씩 조성하고 지역 중기·스타트업에 중점 투자

- 출자 참여 지방정부·지역기업 대상 인센티브 마련(주식매수청구권 신설* 등)

* 최초 출자자는 출자지분의 30% 이내에서 모태펀드에 출자지분을 매각할 권리 부여

□ 지역 창업 결림돌 제거 신규

- ‘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’ 본격 운영으로 창업가 7대 고민 원스톱 해결

① 7대 상담 분야 : 법률, 세무, 경영, 규제, 지원사업, 창업공간, 행사 · 네트워킹

② 오프라인 17곳(‘25.12, 美 실리콘밸리 등 확대) + AI 기반 ‘온라인 원스톱 지원센터’(‘26.1분기)

③ 대기업 퇴직인력, 성공 창업가, 전문가 등 1,600여명 자문단 구성

- ‘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’로 복수 지역이 덩어리 규제를 한 번에 제거
(‘26. 2곳 시범 운영 → ~’30. 5곳으로 확대)

- 중기부 광역연계에 적합한 新 융합산업 모델(5개) 제시 → 지방정부 주도적 기획

* 스마트농업, 新유통물류, 新해양레저, 의료관광, 수소 총 5개 사업모델 제시 예정

- 신산업 갈등·규제 완화 등을 위한 공론화 장 마련(협·단체, 국조실 등 협업)

③ 모험 투자자가 이끌어가는 벤처투자 40조 시대 개막

□ 민간 벤처투자 참여 촉진

- (법정기금) 벤처투자 참여 실적에 따른 기금평가 가점 확대(現 최대 1점)
- (퇴직연금) 투자 가이드라인 마련('26. 업계·노동부 협의) → 벤처투자 허용('27)
- (세제) 적용 대상 피투자기업의 업력 제한 완화(7→10년 이내, 기재부 협조)
 - * 최근 3년간 업력별 벤처투자 비중 : (~7년) 62%, (7~10년) 17%, (10년 초과) 21%
- (은행) 벤처투자에 대한 위험가중치* 하향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
 - * 자산의 위험가중치가 높을수록 은행의 건전성 지표(BIS 등)에 불리하게 작용

□ 정부 마중물 역할 강화

- '26년 정부 모태펀드 출자 대폭 확대('25. 1조원 → '26. 1.6조원, +58%)
- 연기금·퇴직연금 등이 출자할 수 있는 '국민계정'을 모태펀드에 신설*
 - 모태펀드가 과감히 위험손실을 우선 부담
 - * (現) 10개 부처가 19개 계정에 재정 출자 → (改) 연기금 등이 출자하는 '국민계정' 추가
- 아시아 금융허브(싱가포르)에 '글로벌 모펀드' 신설 및 모태펀드 공동 출자
 - * 싱가포르는 외국인 출자자에게도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여 해외 투자자 선호
- 모태펀드와 국민성장펀드간 '투자 이어달리기' 체계 마련
- * 모태펀드가 발굴·육성한 (예비)유니콘 기업에 국민성장펀드가 후속 투자

□ 회수시장 활성화

- M&A 추진 인수기업 대상 M&A 보증 범위 및 한도 확대*
 - * (기존) 기술혁신형 M&A 보증(최대 200억원), 기업승계형 M&A 보증(최대 100억원)
 - + (신설) 벤처투자조합 인수목적 SPC형 M&A 보증(최대 500억원)
- 일반 세컨더리, LP 지분 유동화 등 다양한 세컨더리 펀드 확대 조성
- 모태펀드 출자 벤처펀드가 구주 매입 시 한시적 주목적 투자로 인정(최대 20%, '25. ~ '30.)

④ 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하는 성과 창출

□ AI·딥테크 스타트업 집중 육성

- ‘차세대 유니콘 발굴·육성 프로젝트’ 본격 개시(‘26. 1.2조원 펀드 조성)[신규](#)
 - ‘창업 → 스케일업 → 유니콘 도약 및 해외진출’ 등 기업 성장단계별 기업당 최대 1천억원 투자·보증 집중 지원
- 잠재 유니콘을 패스트트랙으로 유니콘화하는 ‘유니콘 브릿지’ 신설(‘26. 50개사, 320억원)[신규](#)
 - 시리즈B 스타트업에 대규모 사업화(6~16억원) + 기술보증(100~200억원)을 지원하고 목표 달성을 수준에 따라 사업화 자금 환원
- 정부 확보 GPU(약 5만장)의 AI 스타트업 활용 방안 마련(과기부 협조)[신규](#)

□ 혁신 스타트업의 글로벌 도약

- 엔비디아, 구글 등 빅테크기업과 함께 스타트업 해외 진출 확대(‘Around X’ 프로그램, ’25. 14 → ’30. 30개)
- 해외 주요국의 한인 스타트업 협·단체와 ‘가칭 K-파운더 네트워크’ 구축[신규](#)
 - * APEC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APEC 회원국 우선 구축 → 역외 확대
 - ** 중기부 – 한인 스타트업 협·단체 공동으로 현지 액셀러레이팅, IR, 연례행사 등 개최
 - 美 한인 스타트업 단체와 협력하여 ‘UKF 82 스타트업 서밋’ 개최(‘26.1), 한국 유망 스타트업 IR 등 해외진출 기회 부여
- * UKF(United Korean Founders, ’24.10~) : 한인 스타트업·투자자 등 회원 약 1,500명
- 재일교포 등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인 투자자와 공동펀드 결성[신규](#)
 - * (예시: 제주출신 재일교포 출자 공동펀드) 도쿄세경센터·모태펀드·제주도가 각각 40억원·30억원·3억원을 출자하여 100억원 규모로 공동펀드 조성
- 美 실리콘밸리 스타트업·벤처 캠퍼스*(‘26.1), 中 칭다오 GBC(‘26.上) 조성
 - * 바이어 발굴, 현지화 지원, 투자유치 등 분산되어 있던 거점별 기능을 통합

- ◇ 지역 제조 중소기업의 생산성 혁신 : 제조 AX, 돈이 되는 R&D
- ◇ 정상외교 성과 활용, K-뷰티·푸드 등 中企 글로벌 진출 전략적 지원

**핵심
목표**

- | | |
|----|---|
| 핵심 | · 지역 中企 매출액 : ('25) 982조원 → ('26) 1,059조원 → ('30) 1,432조원 |
| 목표 | · 중소기업 수출액 : ('24) 1,110억달러 → ('26) 1,200억달러 → ('30) 1,500억달러 |

① 지역 중소기업 AI 대전환

- 중소 제조 스마트공장 1.2만개 구축('26. 1,285개 → ~'30. 1.2만개)
 - 산재 예방, 불량 검출 등 공정별 특화 AI 스마트공장 구축(430개)
 - K-뷰티·푸드 등 中企가 강한 분야에 특화된 스마트공장 구축(585개)
 - * 범부처 협력 : (식약처) 화장품·식품, (산업부) 조선·자동차 등, (과기부) 보안, 5G 등
 - 삼성·현대 등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간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(270개)
 - LLM, 인력, 솔루션 등 대기업의 AI 자원을 활용, 협력 중소기업의 AI 도입과 활용을 촉진하는 상생형 AI 스마트공장 구축(20개)
 - 제조DX 멘토단(대기업 출신 등 1,300여명) 내 AI 전문가를 ‘AX 어드バイ저’로 선별 → AI 도입 사전기획, 사후관리 컨설팅 지원('26. 87억원)
- 제조 AI 전문기업 육성
 - 제조 AI 솔루션·장비 개발을 위한 전략적 R&D(48개 과제, 681억원) 추진
 - 스마트제조 기술 역량 우수 중소기업을 선별하고, AX역량 등 심사를 거쳐 전문기업으로 지정하는 육성 체계 마련 **신규**
- 제조 AX 혁신 생태계 조성 **신규** ※ 「스마트제조산업육성법」 제정('25.9.9 발의)
 - ‘제조AI 24’ 플랫폼 구축 → 스마트공장 구축부터 제조데이터 분석, 제조기업·전문기업 매칭 등 원스톱 지원('26. ISP 수립)
 - 제조 AI (예비)연구인력과 수요 중소기업의 매칭-취업 전주기 지원*, 재직자 AI 특화 계약학과 및 AI 리터러시 교육 등 운영
 - * 교육 → 인턴 → 채용 → OJT → 우수인력 연계 지원(인건비 50%, 3년)

□ 지역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보강

- 中企→중견 도약을 위한 점프업 프로그램 확대(100개사 → 5년간 500개사)
 - 신산업·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화·R&D·컨설팅 등 3년간 패키지 지원
- 지역 중소기업 AI 대전환 프로젝트 추진(7개(신규 2개) 지역) → 지방정부가 지역 산업특성·여건에 맞게 AX 기획 → 정부예산 매칭(2년, 60% 이내)
 - 지역산업 AI 융합·격차해소 등 AX 확산을 위한 「中企 AI 촉진법」 제정
- 5극 3특, AI 등 신산업 전환 흐름에 맞춰 지역주력산업 개편 [신규](#)('26.上)
- 제3자 기업승계형 M&A 활성화 [신규](#) : 지역 내 명문 中企 가치 보존 → M&A 매칭·증개 플랫폼 구축 등 「기업승계특별법」 제정('25.12.10 발의)

② 확대된 R&D 예산을 '돈이 되는 R&D'에 집중 투자

□ TIPS 프로그램 확대 및 체계화

- VC先투자에 정부가 연계 지원하는 TIPS 확대('25. 850 → '26. 1,200개사)
- TIPS를 창업→스케일업→글로벌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 구조로 정립
 - * (창업 티스) 2년 8억원 → (스케일업 티스) 3년 20~30억원 → (글로벌 티스) 4년 50~60억원

□ 한국형 STTR(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전용사업) 도입 [신규](#)

- * (美 SBIR) 11개 부처 R&D 예산 3.2%를 中企 할당 의무 → KO-SBIR 도입('98~)
(美 STTR) 5개 부처에서 中企 기술이전·사업화 R&D 의무 추진

① '민관 공동 기술사업화 R&D' 신규 추진('26. 500개 과제, 1,299억원)

- * 기획 단계에서 기술·시장검증을 의무화 후 본격 R&D(2년 10억원) 추진

② R&D 우수 성과기업에 '기술사업화 패키지' 지원(160개사, 최대 1.5억원)

□ 탄소감축 R&D 추진

- CBAM 대응을 위한 철강·알루미늄 분야 中企 탄소감축 R&D 지원(50억원)
- 탄소감축 생태계 마련을 위한 「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법」 제정('26.上)

③ K-뷰티 등 중소기업이 강한 소비재 분야 수출 확대

□ K-소프트파워를 활용한 뷰티·푸드·패션 등 소비재 수출 강화 신규

- K-뷰티 등 수출거점 지역(1~2곳) 발굴 → 전시·체험·상담 등 공간 마련, K-뷰티 성지로 육성('초혁신경제 15대 선도프로젝트' 선정, '26. 30억원)
 - 뷰티 초기 생산자금을 지원하는 'K-뷰티론' 2배 확대(200 → 400억원)
 - * 지원범위 : ('25) 화장품 생산비용 → ('26) 화장품 용기 등 필수부자재 추가
- K-뷰티·푸드 등 소비재 수출전략품목 500개 발굴('26. 180 → ~'30. 누적 500개) → 수출지원 우선 선정, 민간 협업 입점·마케팅 지원

□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활성화 신규

- 글로벌 플랫폼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'K-온라인 수출 유망품목' 발굴 → 민관컨설팅·기획전, 정부온라인 수출바우처 등 민·관협업 지원
- 민간 검증(TIPS 등)을 거쳐 'K-브랜드 전문 유망 플랫폼'(5개사 내외) 엄선 → 글로벌 도약 지원 : 리뉴얼(2억원), 현지 법인 설립자금(10억원) 등
- 위·모조품 대응 IP 보호 컨설팅 지원한도 2배 확대(1,500 → 3,000만원)

□ 관세협상 결과 기반 美 진출 확대 및 신시장 개척

- 수출전문회사의 해외 네트워크·정보를 유망 中企·소상공인과 연결하여 'K-수출 개척단'(~'30. 100개)을 조직하고 정부 4대* 패키지 지원 신규
 - * ①마케팅 바우처 + ②컨소시엄(전시/상담) + ③해외인증 + ④GBC(공간)
- 대·중소기업이 함께 對미 투자 프로젝트 참여 시 인센티브 강화
 - * 해외 동반진출 프로젝트 지원금 상향(現 최대 10억원), 기보 보증 200억원 연계
- 재외공관 등 신규 해외 수출규제 동향 전파 → 중기부 규제 대응 교육·컨설팅 지원
 - 산업부 통상협의 시 규제 해소 논의 등 범부처 협업 추진

※ 「가칭 中企 수출·해외진출 촉진법」 제정으로 글로벌화 정책체계 정립 신규

* 中企진흥법 등 4개 법률의 수출·해외진출 지원근거 일원화 및 수출 단계별 조문 체계 정립

- ◇ 불공정·기술탈취 기업은 제재 강화 등 무관용 원칙 적용
- ◇ 일방적·시혜적 상생 → 상생으로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로 전환

**핵심
목표**

- 中企 기술보호 역량 : ('24) 49점 → ('26) 55점 → ('30) 65점
- 상생결제 거래액 : ('25) 181.4조원 → ('26) 185조원 → ('30) 200조원

① 기술탈취 ·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제도 확충

- 불공정·기술탈취 기업 정부 정책 참여 제한 [신규](#) ('26년부터 단계적 확산)
 - 공공조달 입찰 제한 및 금융, R&D 등 정책지원 대상에서 제외
 - * 참여제한 대상 정책, 제한기간 등은 유사 사업 등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
 - 불공정·기술탈취 기업 리스트 공유 등 중소기업 정책뿐만 아니라 타부처·지방정부 정책으로 단계적 확산하여 일관된 정책기조 유지
- 기술탈취 근절 대책(9.10) 차질없이 추진 [신규](#)
 - ‘한국형 증거개시 제도’ 입법 완료 및 현장 안착(법원 등 유관기관 협조)
 - *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를 통해 당사자 사실조사 및 조사결과의 증거능력 인정
입법현황 : 「상생협력법」 개정안 발의(11.12) → 산중위 통과(11.21) → 與 핵심입법 선정(12.4)
 - 기술탈취 기업 강력 제재 3종 세트(행정제재·과징금·손해액확대) 입법
('기술보호법' 전부개정, '26.1분기)
 - ①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강화(시정권고 → 시정명령, 벌점, 교육명령, 과징금)
 - ② 반복·악의적 기술탈취 기업에 과징금 최대 20억원 부과
 - ③ 기술개발에 소요된 합리적 비용을 손해액으로 인정
 - 지자체, 공정위, 경찰청, 산업부 등 기술탈취 범부처 대응단 출범('26.1)
- 불공정거래 피해구제기금 신설 [신규](#) ('공정거래법' 개정, 공정위 협조)
 - 재원 공정위 징수 과징금, 용도피해 中企 소송비용·경영안정자금 지원
 - 전문기관이 피해 우려 인정 시, 분쟁·소송 결과 전이라도 선제적 지원

② 상생하며 성장하는 기업생태계 조성

□ 상생협력의 범위 확장

- 수·위탁을 넘어 금융사·온라인플랫폼 대상 동반성장지수 평가 실시 신규
- 성과공유제 확대 : 기존 수·위탁(63만) → 확대 플랫폼·유통·대리점 등(270만) 신규

□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및 협상력 강화 신규

- 사업영역보호 등 상생협약 준수 의무 및 이행점검 법제화(「상생협력법」)
- 중기협동조합에 협의요청권 부여, 필요 행위는 담합 규정 적용 배제
- 납품대금 원가계산 컨설팅(1,000건), 에너지 모니터링 설비(최대 3억원) 지원

□ 공공배달앱 및 상생결제 지속 확산 신규

- 공공배달앱의 지역화폐·온누리상품권과 연동 강화, 공공서비스 (취약계층 도시락 배달, 결식아동카드) 전달 기능 연계
- 지방공기업 평가 등 지표에 상생결제 배점 확대(결제실적 0.3점 반영), 중소기업 하도급 대금 지급시 상생결제 사용 단계적 의무화

□ 수요 대기업·공공기관과 스타트업간 다양한 개방형 혁신 강화

- (방산) 한화오션 등 대기업과 ‘방산 스타트업 챌린지’ 개최 → 軍 실증
 - * (항공) 드론 운용 영상분석, (함정) 국제상선 공통망 음성-문자 통번역 시스템 등
 - 軍 보유 데이터·인프라 스타트업 제공 → 우수 기획과제 사업화 지원
- (AI) 외교성과 GPU 확보 대기업(SK·네이버) 등과 ‘AX 챌린지’ 분야별 개최

AI 스타트업	+	LLM · AI 파운데이션 정예팀 스마트 기기 · LG(온디바이스) · 퀼컴	도메인 AX · 핵심 산업별 수요기업 G2B · 정부 · 공공기관	팹리스 · 국내 파운드리 플랫폼 · 카카오 · 야놀자 등
------------	---	---	---	--

- (기후테크) 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 활용 → 현장형 실증 기회 제공, KAIST 등과 기후테크 챌린지 개최 → 창업패키지·후속투자 연계
- (우주) 사업화 → 개방형혁신(항우연) → 판로(세계 3대 전시회) 전주기 지원